

북한 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의 실천개념과
민족적 주체의식의 문제



연구위원 조가경

[문 헌]

참고된 문헌은 주란에 별도로 기입하였으나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차례로 다음과 같다.

「김일성저작 선집」 I - IV (김일성 선집 제 2 판에서 선택한것)

조선노동당 출판사 1956 - 1967

「근로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965 - 1970

「공산주의 문제연구」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1961 - 1969

동 「세미나 논문집」 1, 2 집



I. 서 론

「주체」 또는 「주체성」에 관한 북한공산주의 지도자의 빈번한 언급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큰 관심거리가 된다. 특히 「민족적 주체성」이나 「민족경제의 자립」과 같은 언투는 엄격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얼마 전까지 듣기 어려운 말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55년경부터 「사상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들고 나서면서 북한 공산당의 노선에 「자주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한 그의 연설이 소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박창욱등 일파를 견주었고 간접적으로는 소련의 지배에 대한 전면적인 추종에서의 이탈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북한공산주의의 이념적인 평가에 어떠한 전환점을 획한 것 같기도 하다. (註1)

과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의 이론,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계급혁명의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함축하는 것일까? 그것이 M.L주의(이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렇게 약칭함)에 대한 어떤 수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김일성이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듯이 M.L주의에 근본적인 독창적 해석을 가해서 진일보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아가서 M.L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그 실천개념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천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註1.)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1964, pp.325ff.)
(1955년 12월 28일부 공산당의 「당 선전선동 일꾼 앞에서 행한 연설 참고)

문제는 순수한 공산주의 이론 자체의 내부에만 한정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의 전망을 위하여 북한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사상이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인 새국면을 열어주는지 하는 점에도 쫓길 수 있다. 설사 그것이 위장된 사상 공세요 군사적 침략을 한손으로 준비하면서도 협상과 평화통일을 내세우는 과거의 수법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주체사상」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음미하여 북한공산당의 심리전에 대비하는 것은 남한 자체의 사상적 성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로 생각된다.

공산주의자의 「민족주의화」의 경향은 국내 국외의 두가지 정세에 비추어서 항상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민족의 역사나 문화 자체에 대한 순수한 감정에서 짚은 것이 아니라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취해지는 임시적 태도이며 마르크스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이고 결코 「애국주의」(nationalism)와 타협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어느 초보적 공산주의자일지라도 확신해 마지않는 바다.

그러나 또 한편 공산주의자가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뜯어고치려 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1천만에 달하는 동포가 조국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로서 결코 등한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그 실질적인 내용은 여하튼간에 「민족」을 되찾고 「민족문화」를 숭상하고 「민족적 긍지」를 살리며 「애국주의」를 제양하여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도 자주적 입장을 취하려는 북한공산주의지도자의 선전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민족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위하

여 하나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못되리라는 법도 없다. 북한공산주의사상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자극정신함양을 위한 하나의 객관적인 척도가 확립될 수 있다면 빛보다도 그러한 연구는 「주체성」의 개념의 엄격한 비판을 전제로 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 김일성의 연설과 담화를 기초재료로 삼아 첫째로 M.I. 주의의 「이론」에 비추어 본 「주체사상」과 둘째로 M.I. 주의의 「실천」 개념과 관련된 「주체사상」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로는 이 사상의 국외국내적 정세와의 구체적 관계를 논하고 넷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족주체성과의 비교를 시도하여 결론의 부분에서 종합적 비판으로 이끌고자 한다.

II.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에 비추어 본 북한 공산주의의 「주체사상」

「과학, 교육, 문학, 예술을 비롯한 사상전선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나라의 것을 위주로 하며 민족적 전통을 살리고 우수한 민족유산을 계승발전 시키며,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도 통채로가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여 받아들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우리사람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크게 높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는 경향을 반대하고 모든것을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주체를 세운 결과 과학기술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고 교육 및 간부양성사업에서 질적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개화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지막 줄에 보이는 「사회주의적」이라는 수식구(修飾句)만 떼놓으면 어떤 후진국가의 민족주의지도자가 한 연설처럼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 연설가는 김일성 자신이다. 그는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과학원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사상」의 성과를 해외에 들고 나가서 선전했던 것이다. (註2)

그러면 이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자기평가는 어떠한 것인가? 즉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주체사상」을 자각

註2)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 222 참조

적으로 제시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를 「사상」으로서 철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가?

첫째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전제한다. 민족의 주체성이나 국가의 주체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 공산당, 또는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책과 활동의 지침」으로서의 「주체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록 앞에서 「민족적 전통」, 「민족유산」, 「민족적 자부심」이란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이북공산당의 「주체사상」을 전제로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민족적」 전통이나 유산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공산당의 이론이 그대로 M.L주의를 토대로 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둘째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리켜 그 「창시는 M.L주의와 세계혁명의 발전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註3)이라고 칭하고 있다. 「근로자」에 실린 글을 계속 인용한다면 이 「주체사상은...나라의 독립과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라고 하였다. (註4)

그밖에도 「김일성동지가 창시한」 사상이요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

註3)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 근로자 1970년 1호, p.18)

註4) 위와 같은 장소 참고

-레닌주의적 지도사상」임을 강조하는 구절이 되풀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상의 독창성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어떤 뜻에서 「과학적」이고, 「유일하게 정확한」, 그리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것일까? 김일성 자신이 풀이한바에 의하면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註5)

또 「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과 다른나라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였다. (註6)

이로써 주체사상이 보편적 의의를 갖는다는 점은 설명이 될 수 있겠으나 그 과학성이나 정확성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모든 공산주의자가 M.L주의를 과학적이라고 신봉하고 들어야 하는 기지(既知)의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로 각기 제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실정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소련이나 중공의 「대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미할 뿐 결코 M.L주의에서의 이탈이 아니라 오직 그 가장 「순수한」 이해와 실천을 위함이라고 한다. 「M.L주의의 원칙에 튼튼히 서서 조선의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한다. M.L주의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현실에 알

주5) 동일한 장소, P.19

주6)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P.500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속되지 않고 대담하게 그것을 집행한다」(주7)라는 말도 M.I주의의 대전제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M.I주의와 북한의 현실의 종합, 또는 타협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으나 이 때의 종합의 원칙이 전자에 있자 결코 후자에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M.I주의에 있어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곧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의 문화나 경제를 논할 때의 진의가 나뉘어 있는가를 따지는 표준이 될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주체」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를 안다면 비록 김일성 자신이 그 철학이론을 인용한 일은 없으나 차더라도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의식의 문제가 겉으로 보기처럼 그리 무관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순서상 「주체」 개념이 마르크스철학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에 L.M주의의 국가관과 북한공산주의의 「주체사상」과의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주체」(主体)는 인식활동의 「주관」(主觀)과 구별되는 행위의 개별적 발동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구분은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단어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다 같이 Subject, Subjekt란 말로써 표시된다. 인식은 정적(靜的)인 데 비해서 행위는 동적이므로 행동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관이라기 보다 체험과 체행(體

주 7) 김일성 저작선집, 제 4권 p.220-221

行)을 강조하는 뜻에서 「주체」라는 새로운 말을 쓰게 되었다. 이 기원은 일본의 니시다(西田)철학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주8) 그 사상적인 바탕은 다시금 헤겔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헤겔에 있어서는 흔히 주체성이라 하여 정신의 자아존재를 가리킨 것인데 독일철학의 반성개념 중에서 가장 심오한 것이나 마르크스는 사실 자기의 유물사관에 바로 이 헤겔과 동일한 주체성의 개념을 이끌어 들었던 것이다.

어원상으로는 Subjectum (라틴어), hypokeimonon (그리스어)이다 같이 「밑에 던져져 있음」 「아래에 깔려져 있음」, 「기체」(基體)를 의미하였고 헤겔에 있어서는 세계의 생성변화의 밑에 놓인 정신적 원리였던 것이 마르크스에 이르러 정반대로 물질적인 존재의 원리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점은 보통 극히 간단히 「소박한 유물론」의 도식에 따라 이해되어 왔으며 마르크스의 사상이 얼마나 헤겔의 「정신철학」을 깊이 본따고 있는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초기의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유물론은 헤겔의 생개념을 그대로 받아드려 인간을 본능과 충동이라는 생물적인 하층구조에서부터 규정하되 언제나 자연일반에 대하여 섭취, 동화, 가공하는 강력한 행위의 발동자로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하층구조에서 정신활동에 이르는 단계는 결코 하나의 비약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적인 자연적, 생물적, 물질적인 생활이 정신생활에 영향을 주고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마르크스는 헤겔과 달랐다.

주 8) 일본 평범한 철학사전, p.584 참조

소화기관이 음식을 섭취하고 기타 인간의 유기체가 신진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에서 비롯하여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연이라는 대상을 가공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변화되고 형성되는 순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자연이 신성하다거나 인간에게 알 수 없는 그 자체의 어떤 존재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 그 자신도 자연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자연에 대립시킬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자연이 인간의 일부분, 즉 그의 활동의 「무대」요 「생활필수품」이요 「그의 힘의 실험실」(주9)에 불과하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기원이 자연이외의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의식이나 정신은 역시 자연의 품안에서 태어난 생물로서의 의식이나 정신이요 자연의 품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가공하는 데에서 자연자체, 또는 물질자체에 변증법적인 발전의 싹이 깃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견해에서 우리가 추려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 보다도 그의 인간중심주의사상이다. 이 초기사상에서는 아직 계급투쟁이론은 문제되고 있지 않으나 인간을 거의 만능한 주관으로 정립하고 특히 헤겔이 인간을 관조하는 주관으로서 이론적(theorie) 본질을 중요시한데 비해 마르크스는 행위하는 주체로서 그의 실천(praxis)적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연전체가 인간의 행동무대이듯이 역사도 사회도 전면적

주9) 마르크스, 정시경역학 요강 p.384, 376f. 396

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지는 생산품, 제품 (product)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주체인 인간 자신이 자기를 만들어내는 자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현대의 실존철학에서도 사르트르는 인간을 가리켜 「행동하는 한에 있어서」 자아를 실현한다고 하여 실존주의는 곧 「인간주의」(주10)라고 잘라 말했다. 사르트르와 마르크스는 다 같이 인간이 기성품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본질을 실현시켜가는 존재라고 본다. 그러나 이 두사람 사이의 차이도 분명하다. 즉 마르크스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결단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유물론적 변증법의 필연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며 또 인간을 「개인」의 실존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유개념 (species) 으로서 집단적 인간성의 (Collective humanity)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안되는 일이 없고 인간 자신도 완전히 형성되어 가공되는 대상에 속하며 그 수단이 곧 교육이자 선전이요 그 사업을 소수의 집단, 즉 당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북한공산당의 「주체사상」의 이론적인 전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요소는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김일성의 글가운데에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룬 것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표현은 그 근본적 지향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가 내포하는 지배와 전투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주 10) 「실존주의는 인간주의다」 1947 참조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정신이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맹종맹등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제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주 11) 그리고 집단주의적인 인간형을 키우기 위해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사람들 속에는 집단주의사상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 줍니다」(주 12)

「주체사상」을 「제정신으로 사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존재양식을 「집단주의」적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일성 및 북한의 공산주의지도자가 한국의 통일문제를 두고 그 「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따지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정신으로 산다」는 평범한 말은 단순히 「교조주의」나 「형식주의」를 제거하거나 혹은 소련식, 중국식 「정치사업의 방법」을 거부(주 13)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마르크스사상의 원리에 비추어 인간이 원래 「행동과 실천」을 자각적으로 수행하는 생물로서 파악되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라도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해냄으로써만 비로소 인간다울수 있다는 의욕적, 실천적인 기질(ethus)이

주 11) 근로자 1970년 1월호, p.19 참조

주 12) 「사회주의 건설에 위대한 주동력인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 시키자」, p.15

주 13) 김일성저작 선집 제 4권 p.335, p.347 참조

밑에 깔려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철학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일하는 인간」의 유형(類型)만을 긍정한다. 그것이 빛이 나쁘며 그렇게 안보는 인간관이 또 어디 달리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도 나올만 하다. 그러나 서구의 전통이나 동양사상의 흐름 가운데에는 인간을 반드시 행위와 실천의 면에서만 전면적으로 정의해 버리지는 않으려는 주춧한 경향이 있다. 신 또는 하늘을 섬기고 명상적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뜻을 파악하는 지적 생활에 의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것도 결코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고 무위도식하는 태도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경우 부차런 한 일주일간의 일손을 일요일에 가서 멈추고 종교, 철학, 예술을 통해서 인격의 도야와 존재의 신비에 대한 여유를 간직하는 입장을 가르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전체의 경우 탁발승이나 절식승조차도 그들의 정신수양과 사회인에 대한 영적인 자문으로 인간생활의 균형과 안정을 위한 직접 간접의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며 플라톤의 철인정치에서와 같이 생각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사농공상의 직업인이 따로 있으므로써 사회라는 큰 유기체의 존속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매우 좁은 뜻에서의 일(Arbeit)의 개념에 집착하게 되었다. 마르크스 자신은 심지어 신진대사의 생리작용까지도 일 또는 노동의 개념에 포함시키므로써 일견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내린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일에 대립되는 여가나 정신적 관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결국 인생을 시종일관 일하는 자, 즉 노동자(Arbeiter)의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으니 이

는 일의 개념의 과소정의라 볼 것이며 따라서 인생과 관련된 한
에 있어서 본래적인 일의 개념을 좁혀놓았다고 할 것이다. 구태어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일, 예컨대
당이나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순수한 예술활동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과 계급과 혁명사업을 위한 일 이외에
다른 적극적 생산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공산주의의 체제 안에서는
이 목적 이외의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결국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못될 것이요 주체사상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까닭은 김일성이 정의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어디까지나,
M.L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사상이요 특히 레닌의 계급혁명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국가나 민족을 도외시한 「주체」를 위한 것이기에 계
급의 대립을 넘어선 민족문화나 역사를 살리는 길은 폐쇄되어있기
때문이다.

Ⅲ.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국가관과 북한 공산주의의 「주체사상」과의 관계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그의 「공산당선언」(제Ⅱ부)에서 밝혔다. 조국이나 국가는 조만간 없어질 운명에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벌써부터 조국이 주어졌는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없어질 것이라 해서 노동자의 조국상의 상태를 긍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국가」를 형성해줘야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혁명이론의 큰 문제점이다. 그러한 국가는 「계급국가」로서 종래의 국가와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산대중을 중심으로 한 국가는 임시적, 과도적인 것이다. 그것은 다만 부르조아계급의 권익을 옹호하는 조직인 「현실국가」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마르크스는 기존국가들이 민족적 차이와 적개심 때문에 생겼던 것이지만 무산계급의 「국가」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기존국가들은 붕괴할 운명에 놓여있었다고 논한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의 발전, 상업의 자유, 세계시장의 발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양식의 동일화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와 국가간의 차이가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레닌의 경우에도 국가는 원칙적으로 무산대중에 대한 억압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엥겔스가 「국가는 차츰 계절로 멸망해간다」고 말한데 대해 「무산대중이라는 특수한 억압세력이 부르조아계급이라는 특수한 억압세력을 대치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히 퇴화하는 과정(withering away)으로서 진행될 수 없다」(주14)고 지적하였다. 부르조아계

급의 지배를 교체하는 무산계급의 지배는 「폭력적 혁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레닌은 말한다. 그에 의하면 국가가 자연적으로 차츰 퇴화해 간다는 말은 부르조아에 승리한 다음의 무산계급 독재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는 계급의 마찰을 가능한 한 격화시키고 무산계급의 집권을 하루속히 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레닌의 혁명전략이었다.

노동자계급에 조국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현재 속하는 나라가 오직 부르조아의 이익만을 위한 「계급국가」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합리화시키려는 소수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를 가리켜 제나라라고 생각할 의무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노동자는 자기 나라의 「국가적 이익」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손잡고 「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M.I주의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노선에서는 그 어느 때를 두고 보더라도 이 국제주의를 비판하거나 국제주의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칭하여 「주체적」이라고 한 일이 없다. 오히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일환이며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세계혁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주 15)이라 하였고 또 「우리나라 자체의 혁명진지를 공고화함으로써(중략)

주 14) 레닌 「국가와 혁명, 1917」 참조

주 15) 근로자 「천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참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주 16)는 점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주체사상」은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신봉하고 국제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남보다 앞서 자국내의 혁명을 달성하고 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 과업을 수행하려는 한에 있어서의 「자주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간파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공산정권이 분명히 「대공주의」를 비판하고 공산혁명의 국제주의노선 가운데서도 중소양대국을 평복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전환을 가져온 때에는 북한이 처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인 정세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철저한 실용주의 (pragmatism)야말로 공산주의 운동의 특색인바 이 국내적, 국제적 경제에 대비, 또는 적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동기를 분석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민족적, 국가적인 전지에서의 자주성과 겹치고 일치하는 국면을 보이는 것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여러 단체에서는 이 운동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민족주의 내지 민족해방운동과 제휴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의 중요한 모형이 되어있다. 태평양전쟁시에 모택동이 장개석의 국민정부군과 손을 잡아서 일본군에 저항한 사실이라던가 해방전 한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와 협력했던 예는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소련에 있어서도 소련민

주 16) 근로자 62년 제 6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자」 p. 15

족의 우수성을 자국민에게 인식시키려고 역사, 문화, 과학, 스포츠의 각분야에서 그 「국제주의」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기이한 민족감정을 북돋고 있음을 본다.

북한공산주의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압박에서 해방된지 얼마안되는 혼미와 방황 가운데에서 우선 철저한 소비에트화의 과정을 밟아야 했다. 「소련식 보편주의적 모델이 강요된 결과 자생적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암살되고 말았다」(주 17) 일제하에서의 사대주의사상과 식민지적 노예의식은 그대로 소련의 제도와 문화를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모방하는 타성으로 연결되었다. 이렇듯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사회주의를 토착화시키지 못한」 가운데 강행된 급진적인 사회주의개조의 계획은 드디어 민중의 「혁명의욕」을 감소시키고 김일성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한갓 형해화할 우려를 빚어내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내적 조건에 처하고 새 활로를 타개함을 위한 것이었다. 이때에 김일성이 규탄하기 시작한 국내세력 가운데에는 모스크바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려는 친소파 박창우, 최창익등이 있었고 이들은 이른바 「중립통일안」의 대변자로서 강경파인 김일성과 맞서게 되고 결국 숙청이 되었던 것이다. (주 18)

그러나 김일성은 비단 사대주의에 대한 반대투쟁만을 벌인것이 아

주 17) 이종구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북괴의 자주노선」, 공산주의 문제연구 1968, 제 5권 2호, p.12

주 18) 이동준 「권력투쟁의 진상」, 월간 중앙 1970년 6월호 p.73

나라 동시에 「조선역사」 「조선의 지리」, 「조선인민의 풍속」 「조선말」 「조선의 고전음악, 무용」 등 일체의 전통과 유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재교양계획을 서둘르고 나섰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중략) 우리말은 예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 도덕교양에도 매우 좋습니다」 (주 19) 「우리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 것이 바탕으로 되어야 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합니다. 조선사람의 감정과 거리가 먼 순수한 서양음악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음악은 유행가의 냄새가 적지않게 풍기지마는 조선바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주 20) 이밖에 판소리, 민족적 선율, 한자폐지문제 민족악기의 개량문제등에 대해서 김일성은 기회있을 때마다 고유한 전통을 되살리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아마추어적인 문화정책론이 얼마나 전문적 입장에서 볼 때에 천박한 것인가는 고사하고 우선 대중의 「민족적 자부심」을 자극하는데 적지 않게 유효했으리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문화면에서 완전한 세국주의를 쓰고 자유로운 비판을 일삼는 언론인, 지성인, 교수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한 당교양기구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고 짐작된다. 사실 김일성 개인은 동양의 전통적인 전제군주에 있어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면에서도 완전히 독점적인 정책수립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주 19) 김일성 저작선집 제 4권 p. 5

주 20) 위와같음, p. 152

Ⅳ. 「주체사상」을 제기하게 된 국제정세의 배경

「주체사상」이 이처럼 국내에서의 중심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에 응하는 수단이었다면 국제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넓게 보면 이름은 비록 「주체사상」이라고 부치지 않았을지언정 자주적 노선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의 군소공산주의 국가의 공통된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계각국의 세력균형에 있어서 다원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 여파로서 공산주의진영에서도 현실적인 국가관계가 당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데에 기인한다 하겠다. 현실적인 국가관계는 정치 이외에도 무역, 통상, 경제 등에 의해서 지배되며 또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원자폭탄이나 기타의 대량살륙무기가 사실상 미소양대국의 실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감소시켜가고 있는 이상 약소국으로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일 없도록 각자 현명한 보존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뿔보다도 중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분쟁은 많은 위성국가들에게 더욱 다중심주의의 길을 택하게 하였다. 1956년의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소련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많은 공산국가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각자의 갈길을 독자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이태리공산당의 팔미로 토리아치(Palmiro Togliatti)가 자국의 공산당의 독자적인 노선을 표방하게 된 것도 이때였다. (주21)

주 21) D. 부랙크머 Blackmer, 「이태리공산주의와 세계공산주의」, MIT Press, 1968, 제 1장 참조

북한공산정권을 대표한 최용건은 중소의 아베올로기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로동신문」은 이 대회개회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단계는 상이한 배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주 22) 역시 다중심주의경향을 시인 하였던 것이다.

김일성 자신도 중소분쟁의 기회를 타서 친소나 친중공노선 그 어느 하나에도 쏠리지 않는 중립노선을 지키려고 매우 부심한 흔적이 역연하다. 특히 한국전쟁에 중공이 가입하여 북괴를 전멸의 위기에 처 구해냈고 1958년에 이르기까지 7년여의 주문기간에 전화에서부터의 복구를 위하여 중공이 바친 거대한 노력에 비추어 김일성으 르서는 쉽사리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편만을 들수는 없는 실정이 있다. (주 23)

이리하여 북한공산정권은 사회주의제국간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소련을 상전으로 섬기려는 종전의 태도를 수정하여 사회주의국가간의 「완전평등, 주권독립 및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 미묘한 정책은 소련과 중공의 비위에 정면으로 거슬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양국의 입장을 적당히 비난하면서도 또한 그들의 원조를 계속유차하려는 가대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군사적, 경제적 면에서 북한공산정권의 국제주의와 「애국주의」를 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주 22) 「로동신문」 1956년 2월 27일호

주 23) 이점에 관해서는 Roy U.T.Kim : 「북괴의 대중공판제의 변천」, 공산주의문제연구, 1968년, V권 제II호 p.130 이하 참조

유도 질적이 간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제적인 공산주의세력의 다원화를 기정사실로서 인정하려는 태도는 일찍부터 분명했던 것 같다. 「형제당들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호상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 . . 공산당 및 노동당들 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 받는 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는 각종당들의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 24)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제 20 차 소련공산당대회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이전에 이미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선언했고(1955년) 또 심지어 김일성개인의 항일투쟁을 가리켜 「주체적 혁명역량에 의거해서 투쟁」한 표본으로 삼음으로써 북한공산주의운동이 마치 그 최초의 출발점에서 부터 가장 철저한 「주체성」을 발휘해왔던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기 대국주의자들이 참기 어려운 내정간섭을 가해왔을 때에도 우리당은 오직 세계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확고한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주 25)

이러한 논법은 심리적 논리적인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영도한」 김일성은 그것이 실제의 인물이면 가

주 24) 김일성 저작선집 제 4권, p.347

주 25) 근로자 1969년 7호, p.10

공의 인물이던 간에 국제적으로 매장된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 한때 싸운 무명의 인사였는지도 모른다. 그를 추종한 사람들의 세력도 미미했을 뿐더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좌파 우파의 인사들이 모두 강대국에 호소할 길도 막힌채 백안시 당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가진 학대와 물이해를 무릅쓰고 싸워야 했던 공산주의지도자로서는 「대국인들 바랄 것 없다」는 일종의 반발심, 좌절감에서 오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꼭 소련식과 같이 해야만 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주 26)고 반문했을 때에는 약소한 공산주의 국가가 지도자로서 지난날에 대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그나마 「중소공산국가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자부심이 엿보인다. 모택동이 스탈린이 죽은 다음의 소련지도자를 천대하고 오히려 자기야말로 국제공산주의진영의 실력자요 그 가장 정통적인 이념의 계승자로서 자처하듯이 김일성도 소련의 수정주의노선보다는 훨씬 「혁명적」인 과제를 자부하는 자로서 큰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러한 심리적인 동기에서도 그의 「주체사상」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으리니와 한편 이 사상의 논리성도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논리는 아니나 모든 공산주의자가 엄격히 지키는 사고의 법칙이 있

주 26) 김일성 저작선집 제 4권 P.336

는 이상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이에 관해서 반드시 해명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나 레닌도 벌써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거짓이라도 선한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피압박계급의 해방」이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논리의 대전제로 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은 M.L주의가 과학적이고 경험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그들만큼 엄연한 「사실」을 임의로 고쳐해석하는 예를 보기 힘들다. 공산주의가 득세한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국사」에 대한 새 편찬작업이 전개된다. 중공도 북괴도 유물론적으로 각각 과거 역사를 고쳐 쓰며 노자나 심지어 이조말기의 실학파가 유물사상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되기 일수다. 평양에서 발간된 「조선력사」(주 27)에 의하면 「이익은 유물론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일체 허황한 종교적 교리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 정도의 역사의곡이 일상다반사라면 오늘날 김일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을 주체적으로 조직영도」했다고 그의 과거를 과장하여 수식하는 것쯤은 아무런 곡예도 아닐 것이다. 사실상 1965년에 일본의 조련계 출판사 「혁신사」가 출판한 「김일성전」(주 28)은 그의 부모의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 경력을 날조하고

주 27) 동 P.136

주 28) 「조선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이에 대한 「서평」 참조, 공산주의 문제 1968년 제 V 권, 제 II 호, P.177 이하

김일성을 신동으로서 묘사하고 그의 「투쟁」에 있어서도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완전히 외면한 황당무계한 설을 늘어놓고 있다.

아무리 「주체사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철없는 소년시절의 김일성에게 그 투철한 자각을 뒤집어 써주고 있으니 여기서도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임의로 조작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본다.

한결음 더 나아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화의 논리를 따진다면 여기서도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게 된다. 원래 M.L.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는 역사는 객관적, 필연적인 법칙, 즉 유물변증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속에서 투쟁한 개인이 역사의 법칙을 좌우하거나 이 법칙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력한 개인은 그의 지력과 성격의 특징에 따라 사건의 개별적 양상과 이 사건의 특수한 결과의 일부분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사건의 일반적 방향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견해이다. (주 29)

물론 스탈린치하의 소련에서 얼마나 개인의 우상화, 절대화의 과오를 범했던가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아이로니」로 남게 되었거니와 소련은 좌우간 제 20차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집단지도체」를 지향하고 스탈린격하운동을 벌렸다. 북한에서도 제 3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김일성 자신의 초상화가 가두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송덕문도 철회된 일이 있었다. (주 30)

주 29) G.V. 블레하노브, 「역사에 있어서의 개인의 역할 (사상문고 11권), p. 259 참조

주 30) 김창순 「북한오십년사」 서울 1961, p. 151 이하 참조

그러나 집단지도제도란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체제하에서만 유지가능한 것이요 북한공산정권처럼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및 유엔군 지휘하의 군대와 대치하고 국내적으로도 「대국주의」나 「교조주의」를 따르는 정치체력과 탄압에 허덕이는 대중을 거느리는 입장에서는 이윽고 그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교조주의, 반반수정주의, 반대국주의, 반사대주의를 위한 투쟁은 기실은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반대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일련의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 생긴 정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얼마나 이 일인독재를 위한 수법이 가열했던가 함은 오랫동안 자기파세력으로 알려졌고 북한공산정권내에서 가장 충성심이 두터웠던 「잡산파」마저도 1969년 4월을 기해 숙청되고 말았다는 사실로써 입증된다. (주31)

김일성전기에서 거의 신격화된 그의 빠르치산 투쟁사는 이미 개인의 경력이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인 투쟁사로 되어 북한인민의 필수교양과복으로 경해져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을 「국가」로 호칭하고(주32) 심지어 최근에는 김일성 자신을 「국가원수」라고 정식으로 부르기에 이르렀다는 중공경유의 외신보도도 있다. 숙청당한 김일성반대세력의 주장 가운데 김일성의 「빠르치산 운동」만이 진정한 「민족해방 운동」이었고 기타의 항일투쟁은 모두 「종파투쟁」으로 단정하려는 김일성일

주31) 이동준, 「권력투쟁의 진상」, 월간중앙 1970년 6월호 P.70 참조
 주32) 북한연감 1945-68, 공산전문계연구소, 1968, P.107 참조

주32) Roy U.T. Kim, 「북과의 대중공관계의 변천」 앞에 인용한 부분 P.133

과의 독선주의에 항의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주 33) 이제 그의 독재는 「심은 국가」라고 한 루이 XIV세와 비결될 만한 안하무인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서 그의 「주체사상」은 결국 「주체가 누구냐」라는 점으로 압축시킬 때에 자기개인의 「자아」(ego)라는 모순점이 들어난다. 원래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철학에서 주체라고 불렀던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객관적인 원리, 즉 「이성」이나 형이상학적 원리를 가리켰던 것이지 개인의 의지를 초월한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경우 인간의 「자연적 현존재」가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인간과 자연의 「지배관계」라는 형이상학적 원리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고 본 점에서 그의 「주체」도 역시 초개인적인 「이념」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주 34)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고사하고 그것이 적어도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거족적인 지혜와 판단을 반영할 수 있는 간주체적(intersubjective)인 성격을 띄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 북한공산정권이 내세운 「주체사상」과 대한민국에서 논의된 「민족주체성」의 문제를 비교검토하면서 결론으로 이끌고자 한다.

주 33) 이동준, 앞에선 글, 월간중앙, p.75 참조

주 34) M.Riedel, 헤겔사상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천, 1965, 마르크스의 「주체」 개념에 관한 부분은 p.128 이하 참조

V. 대한민국의 「민족적 주체성」의

이념과의 비교검토

주체에 대한 반성은 역사의 일정한 단계에서 후진국들이 거쳐야 할 불가피한 관문이다. 알찌가 일본이 전쟁에 패배하여 천황을 위시하여 일본인의 주권이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에속되었을 때에도 일본 사회에는 이른 바 「주체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었다. 유럽에서도 전후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실존주의 사상이 만연했던 것은 방황하는 자아의식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었다. 왜냐 하면 실존주의는 빛보다도 전정할 「자아」란 빛인가를 물었고 과학적 보편주의나 기계화된 문명이나 집단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양심의 소재가 흐려져가고 있는 데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유럽각국에서의 실존주의 사상은 또 서구문명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에 대처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일본에서도 전후 마르크시즘의 물결에 사상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주체적 입장이 문제된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불안에 휩쓸린 자유진영의 여러 나라에서도 「주체」문제는 토론되기 마련이며 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정신적 자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따라 「주체논쟁」이 차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실 반성은 행위의 길이 일단 막힐 때에 싹트는 것이요 전로가 일단 확정되어 행동으로 나선 다음에는 「주체성」

의 확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론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주체논쟁은 그 초기적인 형태에 있어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에 의해서 전개되었으며 나중에 정치, 문화, 철학, 학생지도문제 등의 각 분야에 파급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1948년에 유홍렬의 「조선독립사상사」는 멀리 고조선에서 낙랑문화를 형성한 한족을 몰아낸 한국민족의 자주정신을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와 신라의 독립정신을 크게 부각시켰다. 그러나 고려이후, 이조에 이르러 대륙제국과의 사이에 맺어졌던 사대주의적 관계는 현대의 한국인에게 하나의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그것이 일본인들에 의해 과장선전된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인학자 가운데에도 한국사를 사대주의적 역사로서 풀이한 사람도 없지 않았었다. (주 35)

그밖에 「사대주의론의 재검토」(이기백, 사상계 1965년 6월호), 「사대주의론」(이기백, 「국사신론」중의 「사대주의론」), 「문화사대와 지배자 철학」(한영우, 청맥 1966년 6월호) 등도 대체로 강한 외국의 정치나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일삼던 역사적인 시기를 두고 그것이 사대냐 아니냐를 논했던 것이지 진정한 주체성이 뭇인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좀더 적극적인 「주체」 개념은 (a) 서양문명전반에 대한 동양 내

주 35) 신양호는 김부식을 가리켜 사대주의를 고취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한우근, 「한국의 주체성과 전통」,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간행 「한국인의 주체성과 학생지도의 이념」, 1967. p.

지 한국의 고유한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살리려는 입장, (b) 남북 통일외 장래에 대비하여 북한의 공산주의사상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한 민족주의적 사상을 함양하려는 입장, (c) 정치, 경제, 군사의 각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외국에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 비추어 민족 경제나 자주외교, 한국군의 통수권에 대한 제한배제등 문제를 둘러싼 논의, (d) 학생교육을 위하여 교양의 폭을 넓히고 민족의 내일의 일꾼으로서의 자주정신을 신장시키려는 입장등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이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주체성은 항상 「민족주체성」에 관한 것이요 고유한 민족문화, 역사, 언어, 풍속, 예술등의 순수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민족적 주체성의 자각도 그에 따르는 실천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백성이다. 어떤 권력층단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 . . 민족적 주체성은 자유평등의 민주적 토대위에 자각과 실천에 의해 밝혀지며 확립 될 것」이라고 한 박종홍(주36)의 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체사상의 요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첫째로 주체가 한국의 백성들이며 둘째로 자유평등의 민주정신을 기초로 주체성이 밝혀져야 하며 셋째로 자각과 실천을 통해서 주체성이 확립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지적되어 있다. 셋째점은 주체성이 기성품이 아니요 언제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확인되고 재확립되어야 하는 원리임을 논한 점에서 독일철학에서

주 36) 「주체성의 문제」 위에 인용한 한국인의 주체성과 학생지도의 이념, p.7이하 참조

정의된 주체성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겠다. 그리고 M.L. 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주체사상」을 논할 때에도 이 실천이나 창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첫째의 주권재민의 사상과 둘째의 민주적, 자유평등의 원칙에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공산주의자가 주장하는 「주체사상」에서는 국민이나 대중이 주체가 되어있지 않고 당이나 당을 방자한 개인의 절대적인 의사가 그 기준으로 되어 있다. 물론 M.L. 주의의 혁명이론이 다시금 이 당이나 당지도자를 구속하는 근거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자유로운 백성의 합의 (consensus)에 의한 것이 아님은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다. J.S. 밀의 「자유론」에서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의사만을 쫓을 수는 없다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재확인한다. 인간은 오류를 범하기 쉬우니 그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으고 상의해야 한다. 만일 그 어느 특정인에게는 오류가 없고 그의 견해는 절대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민주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과학적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은 물론, 북한에서와 같이 김일성까지도 오류를 범하지 않는 초인간적으로 섬기게 하고 있다. 그들은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였고 가장 「과학적」인 역사나 사회의 이론을 밝혔으며 심지어 실천에 있어서도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길만을 지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체론에서 지적해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비록 민족주의적이라고는 하나 결코 배타적인 「내쇼널리즘」은 아니고 오히려 국가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지향하는 진정한 국제주의정신을

받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국제주의」라고 하면서도 오직 M. D. 주의의 국제주의요 사회주의국가끼리만의 단합이나 협력을 모색하고 그 밖의 「부르조아」적 자본주의국가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세국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제국투쟁의 이론에 따라 공산주의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는 상진상식을 맹세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살발한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최고이념으로 삼고 있지 않다. 「반공」이나 「승공」은 민주주의적인 인간은 기본권과 이 기본권에 입각한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적극적인 적대행위에 나서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당방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호전적, 침략적인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기 때문에 취하는 공세가 아니다. 물론 주체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실지를 회복하고 독재의 굴레에서 동포를 해방하려는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국제적인 시야에서 국제연합의 기구와 협력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평화적인 절차로써 수행하려는 것이요 결코 불가피한 「제국투쟁」의 독단론에 따라 가진 비인도적인 수단을 무릅쓰고 감행하지는 않으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이다.

주체론을 전개하는 사람의 논거 가운데에 한국의 민족주의와 국제주의가 서로 모순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진정한 국제적인 이해가 각 민족국가의 건전한 자아발전을 근거를 삼고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유감이 있다. 민족주의는 자칫하면 국수주의자들의 편견과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심지어

공산진영에서도 중국을 인정안하고 다원화체제를 갖추고 있음은 민족 국가의 현실이 그리 쉽게 추상적인 세계공산주의 속에 해소되지는 못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기술문명과 무역통상의 발전에 따라 세계의 문명이 동질화되어 갈수록 다양한 인종 가운데 상실되어가는 자기동일성 (identity) 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의식적으로 증대되어가고 있다. 공산주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킬락전쟁의 잠재적인 위기가 아니더라도 제국의 독재구조의 장구화, 고질화, 개인에 대한 억압의 만성화로 인해서 그리 달가운 사회체제가 못되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성의 반성은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그 결함을 교정할 줄 아는 유연성과 탄력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은 그러한 반성의 깊이를 허용안하는 폭단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다싶이 하다.

그러나 한편 인간성이나 자유와 같은 궁극적인 가치를 추상론이라고 딱돌리고 제급혁명의 이론 하나로만 무장한 「주체사상」에서 우리는 그 문맹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실천의욕을 본다. 도시 휴머니티의 개발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북한공산주의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소비경제를 억제하고 군비를 확장시켜 왔으며 사회의 맛을 모르는 육구불만의 대중의 생활력 (vitality) 을 전쟁준비를 위해 축적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에서 비판한 바와 같은 명백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표면으로는 소련이나 중공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여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정책을 씀으로써 오직 북한만이 진정한 「민족적」 전통을 있는 자격을 가진 나라요. 남한은 그만큼 민족적자각을 못하고 「식민주의」에 허덕이고 있다는 인상을 부식함으로써 막대한 선전상의효과를 견우고있음을 직시해야 할것이다.